

지방자치 확대 본격화... 직접 민주정치 시험대

지방자치법 30년만에 개정... 지방세 비중 24%→30%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명칭·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지방소비세율 2020년까지 21%로 높여 2년간 지방재정을 6조6000억원 순증케 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확대 정책이 본격화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지방자치박람회 개막식에서 "지방자치 확대 정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지방자치박람회 개막식에서 "지방자치 확대 정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각 시·도에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조례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도록 해 서울과 경기도는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을 늘릴 수 있다.

행안부는 대통령령을 개정,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하고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고 지방의원들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책보좌관은 의회 사무처에 두고 공동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시,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다만, 행정

적 명칭은 만큼 특별·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또 정부서울청사에서 훗날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분권을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한다. 정부는 1단계 기간에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한다. 지방소비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2019년 3조3000억원, 2020년 8조4000억원 등 2년간 총 11조7000억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난다.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다.

또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2019년 3000억원, 2020년 5000억원 등 2년간 총 8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인

건비를 지원하고,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2020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포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연간 3조5000억원 안팎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소방직 지원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오는 2020년까지 6조6000억원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단계 기간에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또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구체적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 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중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0년 기준으로는 지방세 8조4000억원이 이전돼 국제 대 지방세 비율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022년에는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심신미약 형량 줄이는 형법 재검토하라”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의 여력이 높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다면,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었다. 또 "경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시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그는 "의혹 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의가 아직도 완전히 구성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남뉴스

한국당 “지만원 5·18 조사위원 아냐”

자유한국당은 30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한국당 추천인사로 국무 노객 지만원씨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만원씨 추천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만원씨는 5·18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으로 광주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윤 수석은 다만 "야당추천이란 정치적 기피 내지는 회피하고 있다"며 "지난 세월호 특조위 당시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겪은 고초로 인한 학습효과로 인선

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국회의장 1명, 여야 각 4명 등 총 9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장 몫은 안중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가 추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 상임위원에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비상위원에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이성춘 송원대교수를 추천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비상위원 1명 몫으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를 추천했다.

현재 3명(상임1명, 비상2명)을 추천하게 될 한국당만 아직도 추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

여야, 특별재판부 구성·고용세습 국조 '평행선'

민주 “국조 보다 감사가 먼저” 한국당 “특별재판부 수용 못해”

여야는 30일에도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구성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놓고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하는 반면,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조에 앞서 감사원 감사가 먼저 임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부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며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도 정정 사항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국조를 해도 늦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국당은 공정한 채용 경쟁을 가로막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려면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



남북경협특별위 첫 전체회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회의가 끝난 후 김영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 위원장, 추경호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에서 "일자리 찾기에 여념 없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고용세습과 일자리 약탈에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특별재판부 논의가 필요하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사법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본격화하는 예산정국을 앞두고 여야 간 살바 싸움도 치열했다.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470조5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다"면서 "입법·예산 국회에서도 우리 당은 민생과 평화, 개혁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합진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

산안에 대한 100대 문제사업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었다"며 "이를 중심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신규사업과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을 철저히 심의해 현 정부의 세금 중독 포퓰리즘이 더는 확대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익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 민생을 위해 예산을 제대로 배정했는지, 형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평화당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반대”

민주평화당은 30일 새만금에 초대형 태양광·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대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해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작금의 진행 상황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며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과연 정부가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성열 최고위원은 "군산시민과 전북도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무시하고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절차와 법령을 위반한 대단히 잘못된 재량적 대통령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농작물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앞으로 건설될 새만금 공항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전문가들도 해풍의 염분 때문에 바닷가 근처의 태양광 단지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화당은 이날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을 태양광 발전의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한다"며 "애초의 개발계획이 훼손되지 않도록 태양광 발전사업을 대폭 축소해 최소한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나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6834-7400


한마음 공인중개사

- 광산구 송정동 아파트상가2층 34평형(학원적합) 매매가 7천만원
- 동구 계림동 빌라 35평형 5층4층 현임대중 전세8000만원 포함 19년1월만료 매매가1억3천만원
- 남구 백운동 2층상가주택 99㎡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매매가 1억8천만원
- 북구 북동 4층상가주택 대지 98㎡ 보증금1300만 월85만원 안집제외 매가 3억7천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상가주택 230㎡ 보증금 1억2천만원 월85만원 매매가 4억5천만원
- 동구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 132㎡ 보증금3300만 월155만원 안집제외 매매가 5억5천만원
- 동구 두암동 3층상가건물 240㎡ 보증금 3천만원 월220만원 매매가 6억원
- 북구 신안동 5층상가건물 146㎡ 보증금 5천만원 월282만원 매매가 7억원
- 북구 운암동 4층상가주택 145㎡ 보7천만원 월260만원 매매가 8억원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270㎡ 보증금 5천만원 월310만원 매매가 8억5천만원
- 남구 백운동 3층상가주택 210㎡ 보증금 1억원 월500만원 매매가 14억원
- 북구 신안동 대지 520㎡ 매매가 14억5천만원
- 남구 주월동 5층상가주택 대지500㎡ 보증금2억 월920만원 안집제외 매매가28억원
- 북구 운암동 대지2600㎡ 보9천만원 월500만원 매매가 44억원
- 해남 사찰및남골로 1300기 토지3만6천㎡ 매매가 10억원
- 화순 도곡면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4층 3동 객실37개 월매출 6천~7천만원(장부공개가) 용자 28억원포함 매매가35억원

☎ 010-2314-8567 (계림오거리)

2019년 광주 부동산시장 전망과 재테크 성공전략 특강


부동산정책이 변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부동산투자에 정곡을 찌르는 알찬강의!



1. 2019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이렇게 변한다”

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마케팅 전공)

-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 전남지부장
- 前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KPC) 위촉교수, 공무원연수원 등 초청강의



2. 저금리시대 수익성 부동산 투자전략

강사 : 김 형 선 박사 (부동산정책 전문)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건설링 주임교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에듀센터원장
- 저서 :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외 다수

일시 | 2018.10월 31일, 11월 1일 (2시~) 특강

참가 방법 | 선착순 100명 사전접수 062-417-7016

특전-국옥선경매 이용권(7만),강의교재, 사은품 증정

광주 북구 오동동 1110-25번지 (주)G금강2층 강의실(첨단정부청사임) ☎ 010-2636-3635